

일 시 2025.5.14.(수) 오후 2시

장 소 열림홀

벤처·스타트업, 규제를 넘어 성장으로

「성 장 촉 진 형 투 자 환 경 ,
법 과 제 도 가 중 요 하 다」
세 미 나

발제문·토론문



한국 벤처.스타트업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장벽



규제 장벽

스타트업의 64.3%가 국내 규제로 인한 사업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투자 조달의 어려움

71.3%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률.제도의 한계

44.7%가 법률·제도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일부는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창업 지옥"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벤처.스타트업은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환경은 사업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개요 및 구성



규제 현황 분석

산업 진입, 자금 조달, 데이터·개인정보, 고용·노동의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 현황을 분석합니다.



실패 사례 검토

규제로 인해 실제로 실패하거나 위축된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보고, 각 분야별 문제점과 제약 사항을 짚어봅니다.



개선 방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해외에서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산업 진입 규제 현황



규제 내용 및 문제점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인·허가 및 면허 요건이 엄격합니다. 기존 법령이 신산업에 맞지 않아 해석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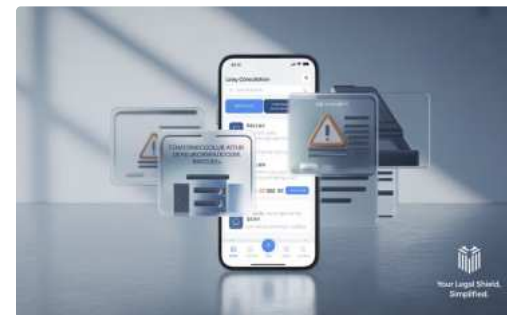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시장 진입 지연, 추가 행정절차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존 업계와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대표 사례: 타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사업 금지는 혁신적 서비스가 기존 규제와 충돌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로톡

법률 플랫폼 로톡의 제약은 전통적 법조계와 혁신적 법률 서비스 간의 규제 갈등을 보여줍니다.

자금 조달 규제 현황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제한하는 자금 조달 규제 현황과 그 영향입니다.



규제 내용 및 문제점

클라우드펀딩 한도 제한과 자본시장 규제의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자격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초기 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응답 기업 71.3%가 자금조달 애로). 해외투자 유치 및 IPO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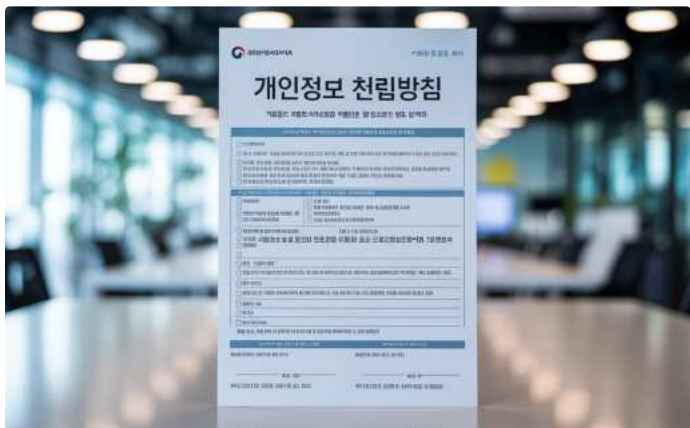


대표 사례

국내 투자 미흡으로 해외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예: 샌드버드 해외이전 성장). 규제의 유연함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현황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에 미치는 주요 영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PIPA)의 엄격한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의 복잡한 동의 요건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제한됩니다. 스타트업의 AI 학습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제

위치정보법 허가제로 인해 위치기반 서비스 스타트업은 사업자 허가 부담이 큼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신고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플랫폼 제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혁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데이터 활용에도 다양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규제 현황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고용·노동 규제 현황입니다



주52시간제 제약

주52시간제로 인해 빠른 개발이 필요한 IT스타트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경직된 해고 요건

경직된 해고 요건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민첩한 인력 구조 조정 및 변화 대응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비자 제한

외국인 창업·취업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고,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비정규직 고용 제한

비정규직 고용 제한으로 스타트업의 단계별 성장에 맞는 유연한 인력 확보가 어렵고 우수 인재 영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실패하거나 위축된 국내 스타트업 사례

앞서 살펴본 규제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제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발목을 잡거나 사업 자체를 좌초시킨 사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환경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소개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업 중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규제 갈등,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위축, 그리고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규제 갈등



변호사협회의 반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행위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1년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 가입시 징계"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법적 다툼 발생

로톡 운영사는 공정위 제소 등 맞대응을 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던 로톡 사건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합법 판결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방침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2023년 대법원이 로톡은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업 제약 및 피해

로톡은 간신히 서비스를 지속하게 되었지만, 이 수년간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위축 사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팬데믹 상황에서 일시적 규제 완화



스타트업 서비스 출시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플랫폼 등장



규제 유지 및 서비스 중단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 등 규제 지속

의료 분야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한 분야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특례를 받았던 체킷(쓰리제이 회사)과 한방 비대면 플랫폼 파닥, 남성 건강상담 플랫폼 쉼즈 등은 규제샌드박스 일몰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기타 사례: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분야 등



숙박공유 서비스 제약

에어비앤비는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민박을 제공할 수 있고 내국인은 안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숙박공유 스타트업이나 호스트들은 사업 기회를 반쪽밖에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2017년 정부는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고, 이후 수년간 법제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해외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거나, 아예 해외 투자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BYE 코리아" 현상

2025년 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본사를 옮긴 한국 스타트업이 6배 늘어 186곳에 달합니다. 설문에 응한 스타트업의 63.4%는 한국의 규제가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방안

지금까지 확인한 규제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규제 유형별로 국내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선 방안은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도출하였으며, 혁신 촉진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 진입 규제 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 효율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특별 승인 후 정식 허가로 이어지는 "규제 샌드박스 → 법제화"의 경로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방식의 패러다임을 기존 포지티브 규제(열거된 것 외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열거된 금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업계와의 상생 조정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충돌할 때 사회적 대타협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개선 방안입니다.



신속한 법·제도 정비

신산업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 관계법령 정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규제 개선 방안



크라우드펀딩 및 자본조달 규제 완화

초기 스타트업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경로를 넓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 상향과 투자자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및 세제지원

민간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 LP(출자자)에 대한 출자 인센티브를 늘려 국내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M&A 및 IPO 제도 개선

스타트업 엑시트(exit) 경로를 확충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제 및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역할 재정립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시장의 빈틈을 메우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후속 투자로 채워주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안



개인정보 규제의 유연한 적용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리스크 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 정비

위치정보법과 같이 스타트업 진입 장벽으로 지적되는 법률은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스타트업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AI 및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특성상 기존 법체계에 규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 전용 규제샌드박스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및 노동 규제 개선 방안



근로시간 제도의 탄력적 운용

스타트업에 맞는 노동규제 특례를 마련하여, 근로시간에서 노사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해고 절차의 합리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용관계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비자 도입 및 인재 유치

스타트업 비자 도입으로 우수 해외 창업자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인력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체계 유연화 및 소득공유 모델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노동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는 노동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 및 시사점

미국
규제 유연화와 스타트업 자본시장 혁신



영국
세계 최초 핀테크 규제샌드박스과 오픈뱅킹



기타 국가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캐나다, 호주 등



싱가포르
스타트업 비자와 규제 친화적 생태계



여러 국가들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실험해왔고, 그 결과 국제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앞서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미국: 규제 유연화와 스타트업 자본시장 혁신



규제 문화의 특성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유연한 규제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단, 금지된 것만 빼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미국의 유연한 규제 문화 덕분에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초기 큰 법적 제약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혁신

콘텐츠 산업에서 미국이 강한 것도, 인터넷 기업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 조 등의 혁신 친화적 규제가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게 이용자 게시물 법적책임을 지우지 않은 덕에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JOBS Act와 자본시장 혁신



JOBS Act 개요

2012년 제정된 JOBS Act는 신생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기 위해 다수의 증권규제를 완화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하고, 소규모 기업이 복잡한 공시 절차 없이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Regulation A+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혁신 내용

스타트업은 1년에 최대 2,000만~5,000만 달러 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발행(공모)이 가능해졌고, IPO 이전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은 상장 시 Sarbanes-Oxley법 등의 회계규제 면제를 받는 등, 성장기업에게 규제 "프리패스"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효과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에퀴티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형성되고 다수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IPO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혁신은 미국이 세계 최다 유니콘 기업 탄생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규제 특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연방 차원에서 Regulatory Flexibility Act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고, 부담이 과중하면 적용 제외나 완화 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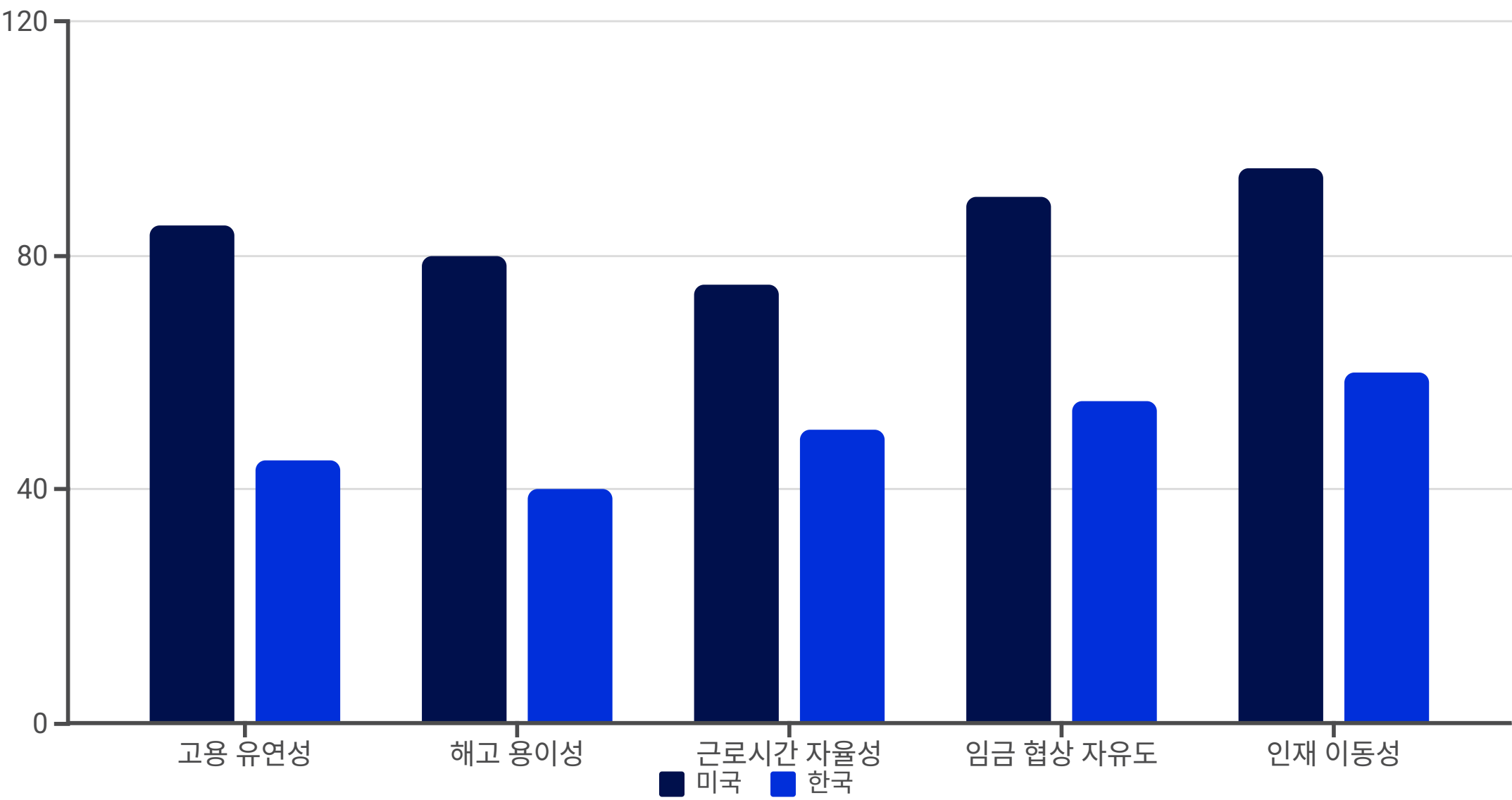
고용의 자유로움(at-will employment) 문화로 인해 기업은 비교적 쉽게 인재를 채용하고, 필요시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주로 실업급여와 자발적 이동으로 보완되고,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미국처럼 혁신 우선, 규제 사후대응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신산업 초기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시장에 맡겨두고, 성장 후 사회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규제해도 늦지 않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시사점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친화적입니다. 고용의 자유로움 문화로 인해 기업은 비교적 쉽게 인재를 채용하고, 필요시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규제 유연성이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혁신 우선, 규제 사후대응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전용 규제완화 법제(예: 한국형 JOBS Act)를 마련해 투자·공시·고용 분야에서 차등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 세계 최초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와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2015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세계 최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면제 받고 테스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166개의 핀테크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뱅킹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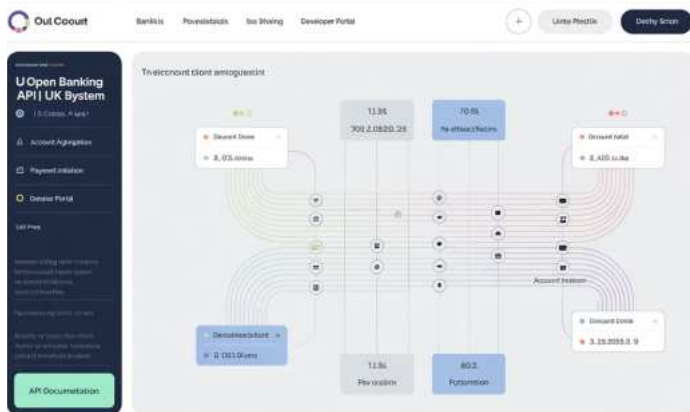
영국은 오픈뱅킹(Open Banking)을 세계 최초로 도입(2018년)하여 금융 데이터 개방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경쟁시장청(CMA)의 주도로 시행된 오픈뱅킹은 은행들이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표준 API로 제3자(핀테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테크시티 이니셔티브

영국 정부는 일찍이 2010년대 초부터 Tech City 이니셔티브로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Innovate Finance 같은 민관협력 조직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했습니다. 런던 테크시티 지역에는 9천여 개 스타트업이 밀집하며 핀테크 허브로 자리잡았습니다.

영국의 오픈뱅킹과 핀테크 성공 사례



오픈뱅킹의 혁신

은행들이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표준 API로 제3자(핀테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과 계약 없이도 고객 동의 하에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핀테크의 성공

영국에서는 결제, 자산관리, 대출비교, 회계자동화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스타트업 Revolut, TransferWise(현재 Wise) 등이 오픈뱅킹 기반으로 유럽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

오픈뱅킹은 전세계 여러 국가로 전파되었고, 한국도 2019년 오픈뱅킹 도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지원 인프라로 요약됩니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



규제기관-스타트업 소통 강화

규제기관과 스타트업 간 소통 플랫폼 정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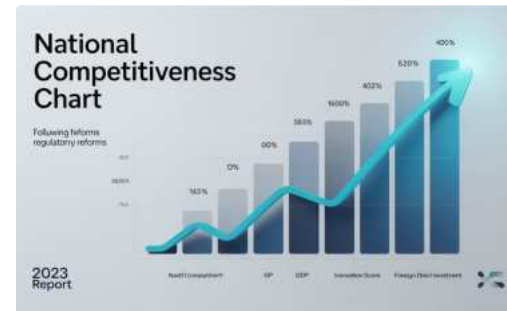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과감한 데이터 개방과 API 표준 통합



규제혁신 인재 양성

정부 내 혁신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규제를 혁신 도구로 활용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영국 사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금융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이미 도입했으나,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영국처럼 규제기관과 스타트업 간 소통 플랫폼을 정례화하고,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신속히 제도화하여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측면에서 영국의 과감한 행보는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의 규제혁신 성과와 시사점



166+ 핀테크 서비스 출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규제기관이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80% 상용화 성공률

테스트 종료 후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규제를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 좋은 사례입니다.



9,000+ 테크시티 스타트업

런던 핀테크 허브에 집적된 효과로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영국은 규제혁신 인재를 정부 내에 양성하여 변화를 주도했으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부처에 혁신 전담 조직과 샌드박스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선제적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비자와 규제 친화적 생태계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과 규제 유연성으로 전 세계 기업가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EntrePass 창업자 비자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해외 창업가에게 발급되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을 평가하여 부여됩니다. 1년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SG 보조금

EntrePass 소지자는 싱가포르 정부의 스타트업 SG 보조금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며, 해외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간소화된 창업 절차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창업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세율도 법인세 17%로 비교적 낮습니다.



유연한 이민 정책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유연성이 두드러지며, 국제적 인재들이 쉽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싱가포르의 인재 유치 전략



Tech.Pass 고급인재 비자

2021년에는 Tech.Pass라는 고급인재 비자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등지의 경력 많은 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년짜리 취업패스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한 해 50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국제화된 스타트업 생태계

인재 이동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은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외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그 효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제화되고 다양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진출 사례

이 제도로 많은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싱가포르에 진출했고,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

싱가포르는 영국에 못지않게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으로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통화청(MAS)이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실험 환경 제공



2022년 Sandbox Plus 출범

규제 테스트 기회뿐 아니라 원스톱 규제 상담 및 재정 지원까지 제공하는 발전된 프로그램



디지털 बैं킹 라이선스 도입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핀테크 산업 성장 촉진



결제서비스법 제정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공으로 Grab과 같은 슈퍼앱의 성장 지원

MAS는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게 멘토를 붙이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도 지급하여 혁신 실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 덕분에 동남아 슈퍼앱 Grab(그랩)이나 해운·물류 스타트업 Agoda 등이 싱가포르에서 본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부 투자와 인프라 지원



정부 주도 투자

정부 산하 SGInnovate, Temasek 등의 펀드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매칭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투자는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블록71 같은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여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는 스타트업 간 협업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투자자와의 만남도 용이하게 합니다.



연구기관 연계

Research기관과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팹리스(fabless) 창업도 장려하여, AI, 바이오, 그린테크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의 시사점



창업비자 제도 강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한국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멘토 역할

규제+재정지원+컨설팅 패키지 제공

한국의 규제관청도 피감독 대상인 스타트업을 길러낸다는 사고를 가지고, 프로액티브 행정을 도입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지향

내수시장 규모 한계 극복 전략

싱가포르 사례는 인재와 자본의 글로벌 흐름을 활용하여 자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운 모범으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기타 국가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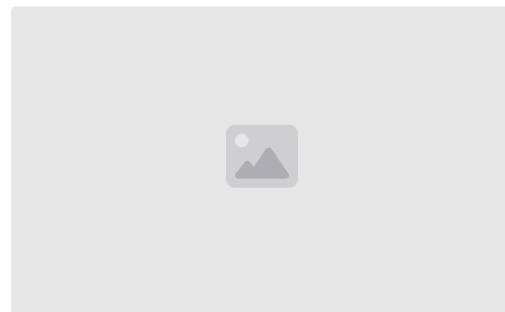
이스라엘: "Startup Nation"

국방기술 민간 이전과 대규모 정부 R&D 지원으로 "Startup Nation"이라 불릴 정도로 혁신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전자영주권(e-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창업자들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EU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등 분야 신생기업을 지원합니다.



호주: 규제 샌드박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등 분야의 혁신적인 신생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유럽연합(EU)의 규제 조화 접근



단일시장 규제 조화

유럽연합(EU)은 단일시장 규제 조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의 공개 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은 스타트업에도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 규제 차이를 줄여줍니다.



5억 인구 시장 접근성

작은 국가의 스타트업도 바로 5억 인구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도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줍니다.



법적 확실성 제공

GDPR 등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한 스타트업이 어느 나라에서나 사업 가능하다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해외 사례의 종합 시사점

인재와 자본 유입 촉진
비자 제도 개방과 투자 장벽 완화



데이터와 시장 접근 개방
공공데이터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확대



정부의 민첩한 대응
빠른 의사결정과 적극적 지원



규제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제약하지 않는 유연성



해외 사례들을 종합하면, ①인재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②데이터와 시장 접근을 개방하며, ③새로운 시도를 제약하지 않는 규제 실험정신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정부의 민첩한 대응과 지원이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유수의 ICT 인프라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제 제도적 혁신을 가미한다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스타트업 성장의 규제 장벽

산업 진입, 자금 조달, 데이터 활용, 고용 분야의 복합적 규제가 혁신기업의 실패나 탈한국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

정부와 국회는 샌드박스 제도 도입, 데이터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국과의 속도전

경쟁국들은 앞다퉀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어, 규제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정책 제언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에 대해 선 허용-후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우선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 하나 보완하는 탄력적 규율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심사 기간 단축, 특례 기간 연장, 추가 조건 최소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 모델은 관련 법령을 신속 개정하여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샌드박스→영구허가의 프로세스를 명문화합니다.



산업별 맞춤형 규제 개선

모빌리티, 원격의료, 핀테크,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법적 지위 부여, 의료법 개정으로 일정 범위 원격진료 허용, 전자금융·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근거 마련 등 핵심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한도 완화, 전문 투자자 기준 합리화 등 스타트업 투자 관련 규제를 푼다. 또한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제3시장)을 육성하여 엑시트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정책 제언 (2)



인재 유입 및 노동 유연성 제고

스타트업 비자 도입으로 우수 해외 창업자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인력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스타트업에 맞는 노동규제 특례를 마련하여, 근로시간 및 고용관계에서 노사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합니다.



데이터 규제 혁신

개인정보 규제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재설정합니다.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은 과감히 열어주고,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법·제도를 마련합니다.



정부 거버넌스 개편

범정부적으로 스타트업 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규제혁신 특별위원회에 스타트업 분과를 두고, 민간 전문가와 창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국제 협력 및 벤치마킹

해외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합니다. 규제혁신에 있어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한국을 글로벌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은 한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기에 이들을 둘러싼 규제환경 개선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한국의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최근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정부는 "규제혁신 2.0" 계획을 발표하며 신산업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일관되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실리콘밸리나 선전, 텔아비브 못지않은 창업 천국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혁신은 허용된 곳에서만 꽃핀다. 이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의 씨앗이 자유롭게 자랄 토양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정부, 국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때, 비로소 제2의 벤처붐과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국 벤처.스타트업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신현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장벽



규제 장벽

스타트업의 64.3%가 국내 규제로 인한 사업 제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투자 조달의 어려움

71.3%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률.제도의 한계

44.7%가 법률·제도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일부는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창업 지옥"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벤처.스타트업은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환경은 사업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개요 및 구성



규제 현황 분석

산업 진입, 자금 조달, 데이터·개인정보, 고용·노동의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 현황을 분석합니다.



실패 사례 검토

규제로 인해 실제로 실패하거나 위축된 스타트업 사례를 살펴보고, 각 분야별 문제점과 제약 사항을 짚어봅니다.



개선 방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해외에서 규제 완화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산업 진입 규제 현황



규제 내용 및 문제점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인·허가 및 면허 요건이 엄격합니다. 기존 법령이 신산업에 맞지 않아 해석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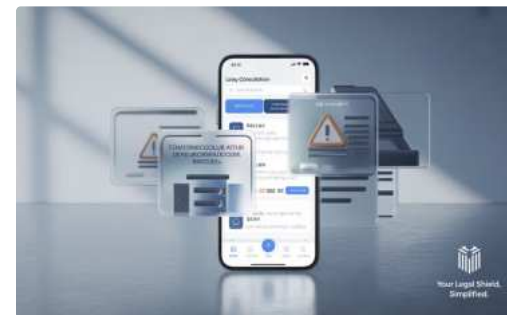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시장 진입 지연, 추가 행정절차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기존 업계와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대표 사례: 타다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사업 금지는 혁신적 서비스가 기존 규제와 충돌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로톡

법률 플랫폼 로톡의 제약은 전통적 법조계와 혁신적 법률 서비스 간의 규제 갈등을 보여줍니다.

자금 조달 규제 현황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제한하는 자금 조달 규제 현황과 그 영향입니다.



규제 내용 및 문제점

클라우드펀딩 한도 제한과 자본시장 규제의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자격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초기 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응답 기업 71.3%가 자금조달 애로). 해외투자 유치 및 IPO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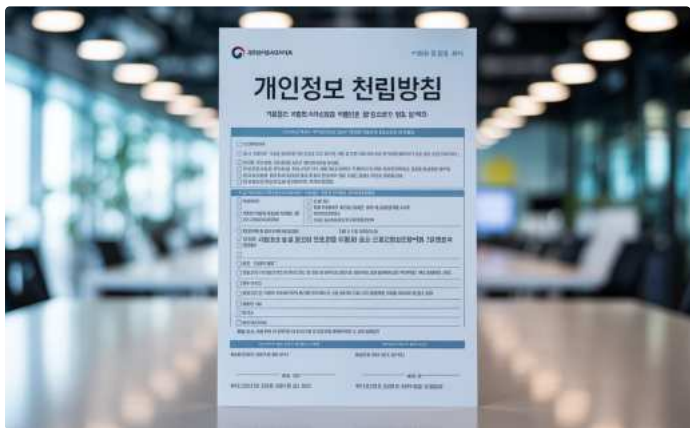


대표 사례

국내 투자 미흡으로 해외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예: 샌드버드 해외이전 성장). 규제의 유연함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개인정보 규제 현황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에 미치는 주요 영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PIPA)의 엄격한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의 복잡한 동의 요건과 엄격한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이 제한됩니다. 스타트업의 AI 학습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제

위치정보법 허가제로 인해 위치기반 서비스 스타트업은 사업자 허가 부담이 큼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신고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플랫폼 제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플랫폼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혁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데이터 활용에도 다양한 제한이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규제 현황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고용·노동 규제 현황입니다



주52시간제 제약

주52시간제로 인해 빠른 개발이 필요한 IT스타트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제한됩니다.



경직된 해고 요건

경직된 해고 요건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민첩한 인력 구조 조정 및 변화 대응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비자 제한

외국인 창업·취업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글로벌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고,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비정규직 고용 제한

비정규직 고용 제한으로 스타트업의 단계별 성장에 맞는 유연한 인력 확보가 어렵고 우수 인재 영입에 제약이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실패하거나 위축된 국내 스타트업 사례

앞서 살펴본 규제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제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발목을 잡거나 사업 자체를 좌초시킨 사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하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환경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유형별로 소개합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사업 중단,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규제 갈등,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위축, 그리고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규제 갈등



변호사협회의 반발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행위에 해당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1년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 가입시 징계"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법적 다툼 발생

로톡 운영사는 공정위 제소 등 맞대응을 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던 로톡 사건은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합법 판결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의 방침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2023년 대법원이 로톡은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업 제약 및 피해

로톡은 간신히 서비스를 지속하게 되었지만, 이 수년간의 규제 리스크로 인해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의 위축 사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팬데믹 상황에서 일시적 규제 완화



스타트업 서비스 출시

닥터나우, 굿닥, 솔닥 등 플랫폼 등장



규제 유지 및 서비스 중단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 등 규제 지속

의료 분야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한 분야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원격진료 특례를 받았던 체킷(쓰리제이 회사)과 한방 비대면 플랫폼 파닥, 남성 건강상담 플랫폼 쉼즈 등은 규제샌드박스 일몰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기타 사례: 공유경제와 블록체인 분야 등



숙박공유 서비스 제약

에어비앤비는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민박을 제공할 수 있고 내국인은 안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숙박공유 스타트업이나 호스트들은 사업 기회를 반쪽밖에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2017년 정부는 ICO 전면 금지를 선언했고, 이후 수년간 법제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국내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해외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거나, 아예 해외 투자자금을 받아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BYE 코리아" 현상

2025년 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본사를 옮긴 한국 스타트업이 6배 늘어 186곳에 달합니다. 설문에 응한 스타트업의 63.4%는 한국의 규제가 사업에 장애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방안

지금까지 확인한 규제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규제 유형별로 국내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개선 방안은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도출하였으며, 혁신 촉진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 진입 규제 개선 방안



규제샌드박스 효율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심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특별 승인 후 정식 허가로 이어지는 "규제 샌드박스 → 법제화"의 경로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방식의 패러다임을 기존 포지티브 규제(열거된 것 외 금지)에서 네거티브 규제(열거된 금지만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업계와의 상생 조정

새로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충돌할 때 사회적 대타협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개선 방안입니다.



신속한 법·제도 정비

신산업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 관계법령 정비를 지체 없이 추진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규제 개선 방안



크라우드펀딩 및 자본조달 규제 완화

초기 스타트업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경로를 넓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모집 한도 상향과 투자자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및 세제지원

민간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인 LP(출자자)에 대한 출자 인센티브를 늘려 국내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M&A 및 IPO 제도 개선

스타트업 엑시트(exit) 경로를 확충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인수합병(M&A)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제 및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의 역할 재정립

정부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고 시장의 빈틈을 메우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후속 투자로 채워주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안



개인정보 규제의 유연한 적용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리스크 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 정비

위치정보법과 같이 스타트업 진입 장벽으로 지적되는 법률은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관 협력

스타트업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AI 및 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특성상 기존 법체계에 규율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해당 분야 전용 규제샌드박스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 및 노동 규제 개선 방안



근로시간 제도의 탄력적 운용

스타트업에 맞는 노동규제 특례를 마련하여, 근로시간에서 노사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해고 절차의 합리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용관계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비자 도입 및 인재 유치

스타트업 비자 도입으로 우수 해외 창업자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인력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체계 유연화 및 소득공유 모델

다양한 형태의 보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노동규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는 노동규제 개선을 위해 정부, 기업, 노동계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성공 사례 및 시사점

미국
규제 유연화와 스타트업 자본시장 혁신



영국
세계 최초 핀테크 규제샌드박스과 오픈뱅킹



기타 국가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캐나다, 호주 등



싱가포르
스타트업 비자와 규제 친화적 생태계



여러 국가들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실험해왔고, 그 결과 국제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앞서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해외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미국: 규제 유연화와 스타트업 자본시장 혁신



규제 문화의 특성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유연한 규제로 유명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 단, 금지된 것만 빼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 자율에 맡기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

미국의 유연한 규제 문화 덕분에 우버(Uber)나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초기 큰 법적 제약 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혁신

콘텐츠 산업에서 미국이 강한 것도, 인터넷 기업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 조 등의 혁신 친화적 규제가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게 이용자 게시물 법적책임을 지우지 않은 덕에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JOBS Act와 자본시장 혁신



JOBS Act 개요

2012년 제정된 JOBS Act는 신생기업의 자본 조달을 돕기 위해 다수의 증권규제를 완화한 법입니다.

이 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하고, 소규모 기업이 복잡한 공시 절차 없이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Regulation A+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혁신 내용

스타트업은 1년에 최대 2,000만~5,000만 달러 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증권 발행(공모)이 가능해졌고, IPO 이전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은 상장 시 Sarbanes-Oxley법 등의 회계규제 면제를 받는 등, 성장기업에게 규제 "프리패스"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효과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에퀴티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형성되고 다수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IPO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혁신은 미국이 세계 최다 유니콘 기업 탄생지가 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국의 규제 특성과 노동시장 유연성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연방 차원에서 Regulatory Flexibility Act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분석하고, 부담이 과중하면 적용 제외나 완화 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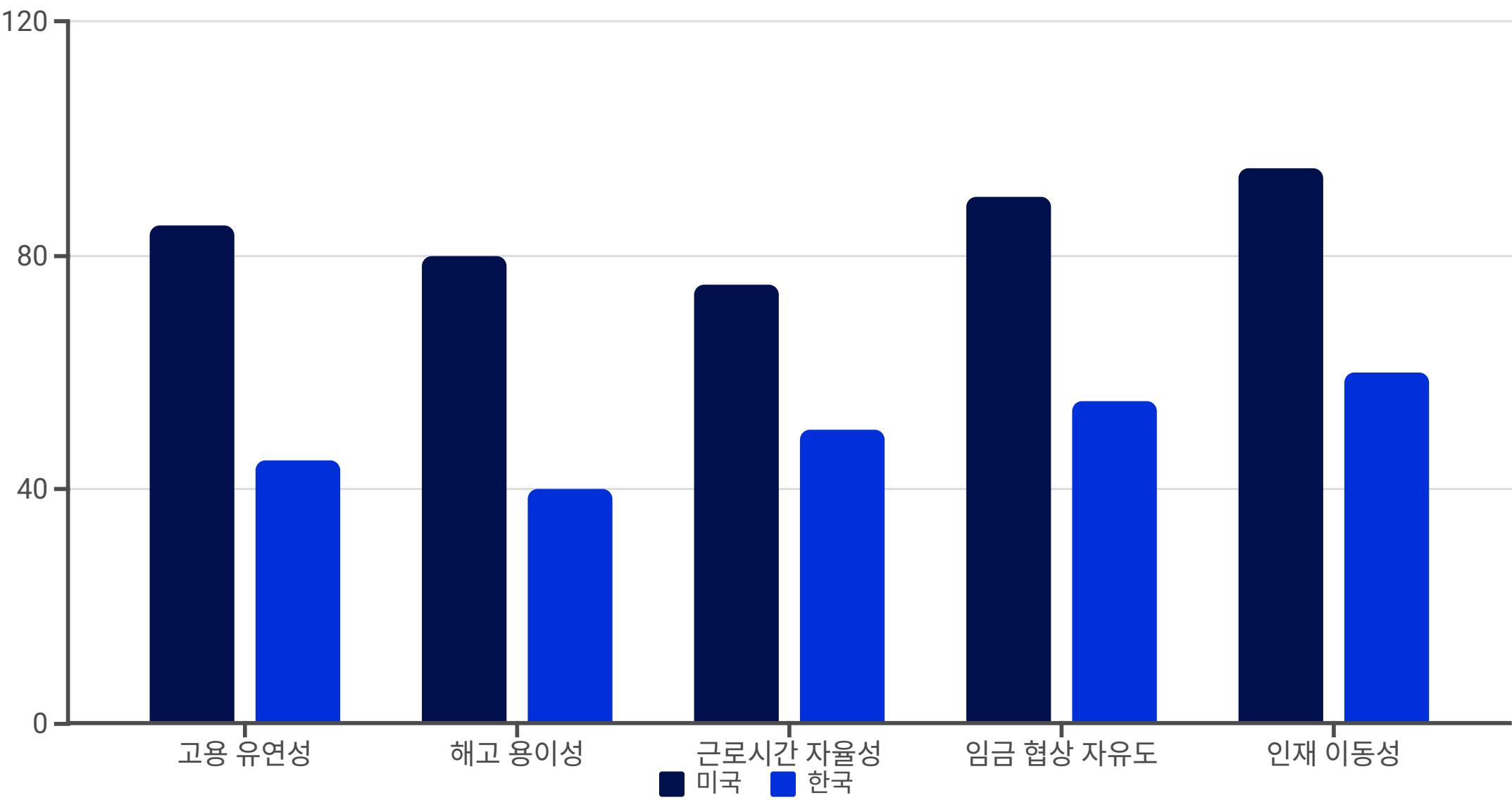
고용의 자유로움(at-will employment) 문화로 인해 기업은 비교적 쉽게 인재를 채용하고, 필요시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은 주로 실업급여와 자발적 이동으로 보완되고,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미국처럼 혁신 우선, 규제 사후대응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신산업 초기 단계에서는 유연하게 시장에 맡겨두고, 성장 후 사회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규제해도 늦지 않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시사점



미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도 스타트업 친화적입니다. 고용의 자유로움 문화로 인해 기업은 비교적 쉽게 인재를 채용하고, 필요시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규제 유연성이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혁신 우선, 규제 사후대응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전용 규제완화 법제(예: 한국형 JOBS Act)를 마련해 투자·공시·고용 분야에서 차등적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 세계 최초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와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2015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세계 최초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면제 받고 테스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166개의 핀테크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뱅킹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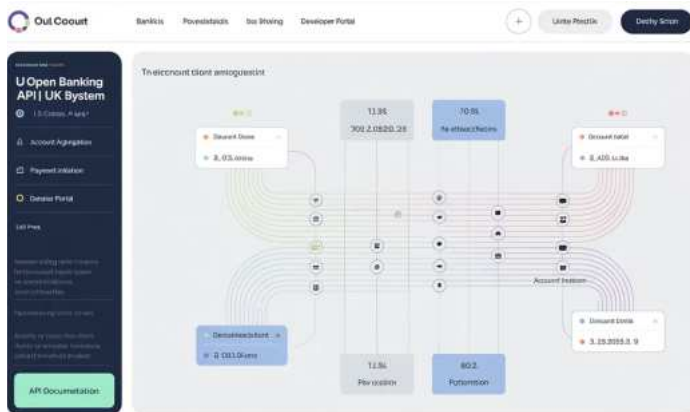
영국은 오픈뱅킹(Open Banking)을 세계 최초로 도입(2018년)하여 금융 데이터 개방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경쟁시장청(CMA)의 주도로 시행된 오픈뱅킹은 은행들이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표준 API로 제3자(핀테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테크시티 이니셔티브

영국 정부는 일찍이 2010년대 초부터 Tech City 이니셔티브로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Innovate Finance 같은 민관협력 조직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혁신을 병행했습니다. 런던 테크시티 지역에는 9천여 개 스타트업이 밀집하며 핀테크 허브로 자리잡았습니다.

영국의 오픈뱅킹과 핀테크 성공 사례



오픈뱅킹의 혁신

은행들이 고객의 금융데이터를 표준 API로 제3자(핀테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과 계약 없이도 고객 동의 하에 계좌정보, 거래내역 등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 핀테크의 성공

영국에서는 결제, 자산관리, 대출비교, 회계자동화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 스타트업 Revolut, TransferWise(현재 Wise) 등이 오픈뱅킹 기반으로 유럽시장 전체를 공략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

오픈뱅킹은 전세계 여러 국가로 전파되었고, 한국도 2019년 오픈뱅킹 도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지원 인프라로 요약됩니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



규제기관-스타트업 소통 강화

규제기관과 스타트업 간 소통 플랫폼 정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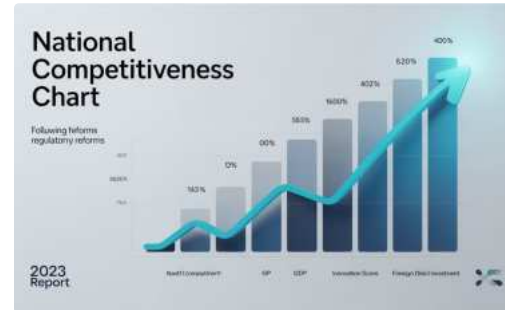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과감한 데이터 개방과 API 표준 통합



규제혁신 인재 양성

정부 내 혁신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규제를 혁신 도구로 활용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영국 사례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금융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이미 도입했으나,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영국처럼 규제기관과 스타트업 간 소통 플랫폼을 정례화하고,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신속히 제도화하여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개방과 표준화 측면에서 영국의 과감한 행보는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의 규제혁신 성과와 시사점



166+ 핀테크 서비스 출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어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했습니다. 영국 금융당국은 규제기관이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80% 상용화 성공률

테스트 종료 후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규제를 혁신의 도구로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 좋은 사례입니다.



9,000+ 테크시티 스타트업

런던 핀테크 허브에 집적된 효과로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영국은 규제혁신 인재를 정부 내에 양성하여 변화를 주도했으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각 부처에 혁신 전담 조직과 샌드박스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선제적 규제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비자와 규제 친화적 생태계

싱가포르는 스타트업 친화적 정책과 규제 유연성으로 전 세계 기업가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EntrePass 창업자 비자

혁신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해외 창업가에게 발급되며,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을 평가하여 부여됩니다. 1년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SG 보조금

EntrePass 소지자는 싱가포르 정부의 스타트업 SG 보조금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며, 해외 창업자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간소화된 창업 절차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창업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세율도 법인세 17%로 비교적 낮습니다.



유연한 이민 정책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정책의 유연성이 두드러지며, 국제적 인재들이 쉽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싱가포르의 인재 유치 전략



Tech.Pass 고급인재 비자

2021년에는 Tech.Pass라는 고급인재 비자도 도입했습니다. 이는 실리콘밸리 등지의 경력 많은 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2년짜리 취업패스를 발급해주는 제도로, 한 해 50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국제화된 스타트업 생태계

인재 이동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은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외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으로, 그 효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제화되고 다양성이 확보되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진출 사례

이 제도로 많은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싱가포르에 진출했고,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아시아 거점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

싱가포르는 영국에 못지않게 혁신 친화적 규제 접근으로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통화청(MAS)이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실험 환경 제공



2022년 Sandbox Plus 출범

규제 테스트 기회뿐 아니라 원스톱 규제 상담 및 재정 지원까지 제공하는 발전된 프로그램



디지털 बैं킹 라이선스 도입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핀테크 산업 성장 촉진



결제서비스법 제정

핀테크 기업들을 위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공으로 Grab과 같은 슈퍼앱의 성장 지원

MAS는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게 멘토를 붙이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도 지급하여 혁신 실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 덕분에 동남아 슈퍼앱 Grab(그랩)이나 해운·물류 스타트업 Agoda 등이 싱가포르에서 본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정부 투자와 인프라 지원



정부 주도 투자

정부 산하 SGInnovate, Temasek 등의 펀드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매칭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 투자는 민간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블록71 같은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여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는 스타트업 간 협업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투자자와의 만남도 용이하게 합니다.



연구기관 연계

Research기관과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팹리스(fabless) 창업도 장려하여, AI, 바이오, 그린테크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의 시사점



창업비자 제도 강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

한국도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멘토 역할

규제+재정지원+컨설팅 패키지 제공

한국의 규제관청도 피감독 대상인 스타트업을 길러낸다는 사고를 가지고, 프로액티브 행정을 도입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지향

내수시장 규모 한계 극복 전략

싱가포르 사례는 인재와 자본의 글로벌 흐름을 활용하여 자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운 모범으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기타 국가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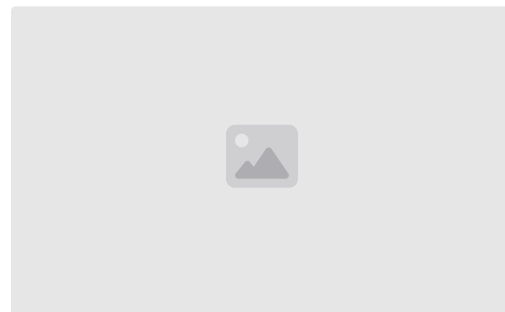
이스라엘: "Startup Nation"

국방기술 민간 이전과 대규모 정부 R&D 지원으로 "Startup Nation"이라 불릴 정도로 혁신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전자영주권(e-Residency)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창업자들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EU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를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등 분야 신생기업을 지원합니다.



호주: 규제 샌드박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핀테크 등 분야의 혁신적인 신생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유럽연합(EU)의 규제 조화 접근



단일시장 규제 조화

유럽연합(EU)은 단일시장 규제 조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의 공개 데이터 지침(Open Data Directive),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은 스타트업에도 동일한 규제 틀을 적용하지만 동시에 회원국 간 규제 차이를 줄여줍니다.



5억 인구 시장 접근성

작은 국가의 스타트업도 바로 5억 인구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국도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줍니다.



법적 확실성 제공

GDPR 등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한 스타트업이 어느 나라에서나 사업 가능하다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해외 사례의 종합 시사점

인재와 자본 유입 촉진
비자 제도 개방과 투자 장벽 완화



데이터와 시장 접근 개방
공공데이터 및 산업데이터 활용 확대



정부의 민첩한 대응
빠른 의사결정과 적극적 지원



규제 실험정신
새로운 시도를 제약하지 않는 유연성



해외 사례들을 종합하면, ①인재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②데이터와 시장 접근을 개방하며, ③새로운 시도를 제약하지 않는 규제 실험정신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또한 정부의 민첩한 대응과 지원이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유수의 ICT 인프라와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제 제도적 혁신을 가미한다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스타트업 성장의 규제 장벽

산업 진입, 자금 조달, 데이터 활용, 고용 분야의 복합적 규제가 혁신기업의 실패나 탈한국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

정부와 국회는 샌드박스 제도 도입, 데이터 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경쟁국과의 속도전

경쟁국들은 앞다퉀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친화 정책을 내놓고 있어, 규제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정책 제언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에 대해 선 허용-후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우선 시장에서 시험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 하나 보완하는 탄력적 규율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심사 기간 단축, 특례 기간 연장, 추가 조건 최소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샌드박스에서 검증된 사업 모델은 관련 법령을 신속 개정하여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샌드박스→영구허가의 프로세스를 명문화합니다.



산업별 맞춤형 규제 개선

모빌리티, 원격의료, 핀테크, 블록체인 등 분야별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법적 지위 부여, 의료법 개정으로 일정 범위 원격진료 허용, 전자금융·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 활용 근거 마련 등 핵심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 지원 강화

크라우드펀딩 한도 완화, 전문 투자자 기준 합리화 등 스타트업 투자 관련 규제를 푼다. 또한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제3시장)을 육성하여 엑시트 경로를 다양화합니다.

정책 제언 (2)



인재 유입 및 노동 유연성 제고

스타트업 비자 도입으로 우수 해외 창업자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인력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스타트업에 맞는 노동규제 특례를 마련하여, 근로시간 및 고용관계에서 노사 자율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합니다.



데이터 규제 혁신

개인정보 규제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재설정합니다. 비식별화된 데이터 활용은 과감히 열어주고,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법·제도를 마련합니다.



정부 거버넌스 개편

범정부적으로 스타트업 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규제혁신 특별위원회에 스타트업 분과를 두고, 민간 전문가와 창업자들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국제 협력 및 벤치마킹

해외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합니다. 규제혁신에 있어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한국을 글로벌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은 한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이기에 이들을 둘러싼 규제환경 개선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한국의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최근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정부는 "규제혁신 2.0" 계획을 발표하며 신산업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일관되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면, 한국도 실리콘밸리나 선전, 텔아비브 못지않은 창업 천국으로 거듭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혁신은 허용된 곳에서만 꽃핀다. 이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의 씨앗이 자유롭게 자랄 토양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정부, 국회, 업계가 한마음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때, 비로소 제2의 벤처붐과 차세대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한국 벤처·스타트업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혁우(배재대)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데자뷔처럼 되풀이 되는 현상, 특히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언제나, 어떤 사례에서나 입증된 원칙에 해당함. 신산업 분야의 규제 역시 과거에도 있었던 스토리의 반복임.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기, 양말 짜는 기계를 발명한 윌리엄 리의 특허요청을 거부하면서, 그가 한 말은 ‘그대의 발명품이 나의 가엾은 백성을 굶어죽게 만들 것이다.’라고 거부했었지만, 사람들은 곧 모두 양말을 신는 사회에서 살게 됨.

기술발전은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임. 따라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는 기술발전에 따른 제도적 이익을 만끽할 수 없음.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발전에 대한 규제지체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낙후된 것이 사실. 스타트업코리아 분석,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유니콘 100대 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개선된 것은 1건에 불과, 2017년 55개 사업이 불가능, 혹은 제한적으로만 가능이었음. 이는 우리나라 규제개선의 지체현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신현한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의 규제현황에 대해 포괄적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 주심. 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름 세 가지로 정리해 봄.

1. 타다, 로톡 등의 사례를 보면서, 원래되는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턴가 심각하게 나타남. 타다는 나름 여객운송사업법을 분석하여, 11인승부터는 운전자를 따로 배치해 사업이 가능함(왜냐하면 그런 규제가 없었으니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고, 나아가 타다금지법과 같이 모빌리티 산업 선진화를 이유로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진입규제를 만든 것임. 로톡도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매우 느리게 진행. 이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포획, 적어도 이해당사자의 투입이 규제운용의 원칙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규제갈등 관리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현재의 현실은, 벤처, 스타트업 규제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개선을 기다리는 규제의 개선에 매우 소극적,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정부의 규제관리에 쇄신이 필요함을 보여줌.

2. 이는 자연스럽게 공무원 책임성과 연결됨. 공직자는 규제해석 재량을 가짐.

명백히 가능한 로톡, 타다 등의 사례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해석을 해 주고, 그 결과 사업이 가능하게 해 줄까의 문제, 애매모호한 규제에서 책임을 지면서도 전향적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 정부의 기능이 정치에 의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왔기 때문임. 정부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고, 명확한 규정에 의해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의 범위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책에 대한 추궁을 받고, 재량의 판단임에도 그것의 불법성 등등을 들어서 문제를 삼는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적극적 해석을 수반한 규제해석과 실행은 불가능함. 어떤 공무원도 자신의 책임이 존중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이것이 현실에서 신산업, 벤처,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규제모순의 지점임.

3. 규제샌드박스는 이를 위해 고안한 제도이나, 문제가 여러 가지임.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고, 실증실험을 하는데도 부가조건 등의 제약이 상당함. 무엇보다 규제부처가 스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하는 모순이 있음. 규제 샌드박스 부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임. 규제 샌드박스 각 부처의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됨. 규제 샌드박스를 통폐합 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조정실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

4. 마지막으로 입법부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함. 입법부의 규제입법을 포함한 불합리한 입법관행은 매우 위험하며, 정부의 부단한 규제개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지점임. 입법부의 규제, 입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함.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토론문]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막는 한국의 법제도와 국민의 태도

강원(세종대)

- ✓ 미국은 창의적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활발히 등장하는 반면, 한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법적 제약에 막혀 좌절되거나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법체계 차이(영미법 vs 대륙법)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미국 (영미법)	한국 (대륙법)
법 해석	판례 중심, 유연성 있음	성문 중심, 명문화 없으면 금지 가능성
규제 원칙	허용 우선, 금지만 예외	금지 우선, 허용만 예외
창업 환경	실험 중심, 사후 규제	사전 허가 중심, 위험 회피적
최근 융합과정	미국도 금융, 의료, 방위산업, 통신 등에서는 사전승인·면허제	한국도 ICT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 규제특례 등 일부 영역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한국에서 없던 법을 만들어 혁신을 가로막은 대표 사례

- ✓ 한국의 ‘타다’는 기존 법안으로 합법이었으나 2020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등의 주도로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사업을 금지시킴. 이후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
- ✓ 한편, 미국도 Uber가 시작되었을 때 제도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법은 새로운 기술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으니 바뀔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선시행 후대응 전략으로 일관. 실제로 로비, 여론전, 사용자 확보를 통해 제도를 뒤따라오게 만들었음.

타다에서 배우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마인드의 중요한 차이

- ✓ 미국은 제도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시스템. 새로운 서비스 출현 → 충돌 발생 → 제도를 수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 혁신을 포용
➔ 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 ✓ 한국은 법과 제도가 국민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옳은 것인지 가르치고 강제는 시스템. 새로운 서비스 출현 → 국회의원이나 행정부가 싫어하면 국민도 싫어해야 해 → 입법 또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
➔ 국민은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위해 존재한다.